‘5·18 학살’ 증거 넘치는데…전두환 “광주와 상관없다” 발뺌

대법원 내란목적살인죄로 인정…회고록 표현 삭제 결정도

정보요원 “5월21일 전두환 광주 와서 사살 명령” 증언도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이게 한 전두환씨(88)가 골프장에서 “광주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전씨가 계엄군을 동원해 총칼로 광주를 진압한 5·18 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고, 당시 광주에 직접 내려왔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지난 7일 강원도 홍천 한 골프장에서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의 질문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나는 광주시민 학살하고 관계 없다”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고 발뺌했다.

법조계나 5월 단체 등에서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등 숱한 증거에도 전씨가 이를 부인하며 ‘역사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보면 전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당시 전씨는 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해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은 1980년 5월27일 광주 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의 살상행위를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씨 등 5명이 5월27일 0시1분 이후에 재진입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해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해 18명을 사망하게 한 살상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남도청 등을 장악하려면 무장시위대를 제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전이 불가피해 사상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하도록 명령했다”며 “이와 같은 살인 행위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실시 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발생한 집단발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당시 보안사령관에 불과했기 때문에 계엄군의 시위진압활동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어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5·18은 다수의 북한군 특수군이 개입해 계엄군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계엄군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무차별적인 총기발포나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했다.

5월 단체 등은 2017년 6월28일 전씨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전씨에게 5월 단체 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 5월 단체 등이 요구한 표현 중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주장한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 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23개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5월21일 집단발포에 전씨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전 미군 501여단 방첩 정보요원인 김용장씨는 ‘1980년 5월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헬기로 광주를 방문했고 서울로 돌아간 이후 광주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살 행위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며 답변하고 있다.

허장완 전 505보안부대 수사관도 “1980년 5월21일 전씨가 광주에 다녀갔다. 사전에 ‘사령관이 오실 것 같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 말은 일선 수사관에게 ‘하사금’이 내려진다는 것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었다. 전씨가 내려온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두환의 발포명령’이라고 칭했던 것을 바로 잡으며 분명한 ‘사살명령’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씨를 헬기가 탑승하는 곳에 데려다줬다는 운전병의 증언과 헬기에 총탄을 실었고, 헬기가 돌아왔을 때 실탄이 줄어있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까지 이어지면서 전씨의 5월21일 발포명령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씨는 현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서는 5월21일에 대한 헬기사격과 집단발포명령자 규명 등이 이뤄질 것으로 5월 관계자 등은 기대하고 있다.

원고 측 소송을 맡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는 “5월27일 내란목적살인으로 광주 학살에 가담한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끝난 상황이다”며 “전씨는 이를 부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더 진상규명 하고자 하는 것은 5월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와 발포명령자 등이다”며 “지금와서 광주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슈 판결

‘점당 100원’ 전체 판돈 14만원 고스톱, 도박일까?

1심·2심 모두 무죄… “일시 오락에 불과”

점당 1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7)와 B씨(66)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충북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점당 100원을 걸고 2시간 동안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판돈은 14만6000원이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시켜 먹고 음식대금을 모르기 위해 고스톱을 쳤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스톱 전용 모포를 준비한 점, A씨와 B씨가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오락의 정도를 넘는 위법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와 총액, 판돈의 규모와 영득 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이번주 2심 첫 공판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검찰이 세월호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의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헬기사고 해역 민간잠수사 투입될 듯

수색당국, 오늘 실무회의

독도 해역 소방헬기 추락 사고 수색당국이 민간 잠수사 투입을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간다.

10일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지원단)에 따르면 행전안전부와 해경, 해군의 민간 잠수 관련 전문가그룹은 11일 오후 2시 대구 강서소방서 3층 강당에서 독도 해역 민간 잠수사 투입을 위한 실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피해 가족들을 만나 “민간 잠수사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발언에 따른 정부와 수색당국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지원단 쪽 전문가 8명과 피해 가족 대표 등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이 총리는 피해 가족들이 머무르는 강서소방서 가족 대기실을 찾아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독도 해역에 민간 잠수사 투입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